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sokwon@kipf.re.kr

- 01 들어가는 글
- 02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03 학술적 기여 및 시사점
- 04 나가는 글
참고문헌

2024. 12. 27.

No.178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요약

- 본 연구는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
- 상속세에 중점을 둔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적정 세부담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함
 -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선호하는 적정 상속세 체계 또한 실제 세제보다 덜 누진적인 경향을 보임
 -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세제에 대한 인식과 가장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정치적 성향과 자산 수준으로 나타남
 - 사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적정 세부담에 대한 선호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
 - 고자산가는 주로 보수적 정치 성향의 응답자와 유사하게 상속세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은 세제 효과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적정 세부담에 대한 선호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침
 - 실제 실효세율 정보 제공 및 응답 방식은 응답자의 적정 세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권성오,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01 들어가는 글

- 한 국가의 세제는 가상의 사회계획가(hypothetical social planner)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
 -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
 -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
 - 세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세법개정안은 행정부에서 준비한 뒤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이 입법 활동이나 여론 형성을 통해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체계를 분석하는 재정학의 최적조세모형에서도 사회 선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예컨대, 최적조세모형을 통해 상속세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과세 필요성과 적정 과세 수준이 사회 선호에 대한 가정에 크게 좌우됨을 보임(Farhi and Werning, 2013)

- 본 연구는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
 - 국민들이 실제 세제와 세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
 - 세제가 노동 공급, 탈세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

- 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
- 세목별 및 과세표준 구간별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를 조사
- 경제력, 연령, 정치성향 등 납세자 인식의 다양한 결정 요인을 분석

02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1. 분석자료

-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적정 세율 정보 활용
 - 재정패널조사는 2018년부터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소득세율을 조사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추가함

- 응답자들은 세목별로 구체적인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 비율을 응답
-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견해 등 응답자의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

그림 1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개인 세전소득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							
	0%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0% 초과
1,000만원	Dark Green	Yellow						
3,000만원	Yellow	Dark Green						
5,000만원	Light Yellow	Dark Green	Light Yellow					
7,000만원		Dark Green	Yellow					
1억원		Yellow	Yellow	Light Yellow				
2억원		Light Yellow	Yellow	Light Yellow				
3억원			Light Yellow	Light Yellow	Light Yellow			
5억원			Light Yellow	Light Yellow	Light Yellow	Light Yellow		
10억원				Light Yellow	Light Yellow	Light Yellow	Light Yellow	

주: 어두운 색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으며, 흰색은 응답 비율이 10% 미만을 나타냄
 자료: 재정패널조사(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걱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단위: %)

총 상속 재산	총 상속재산 대비 걱정 상속세 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1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0억원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주: 어두운 색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으며, 흰색은 응답 비율이 10% 미만을 나타냄
 자료: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유산이 10억원인 경우에 대한 걱정 세부담 수준 문항 예시

지금부터 귀하가 생각하는 걱정 상속세 수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걱정하는 세금 수준을 물어볼 예정이며, 모든 경우에 **사망자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1.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총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대략 얼마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산의 가치 대비 상속세의 비중을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세금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억 ~ 만원)

2A. 유산이 **10억원**일 경우, 귀하가 생각하기에 걱정 수준 상속세는 얼마입니까? 유산의 가치 대비 걱정 상속세의 비중을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세금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억 ~ 만원)

2B.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유산이 **10억원**일 경우, 실제로는 대략 **5천만원(유산의 5%)**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유산이 **10억원**일 경우 걱정 수준 상속세는 얼마입니까? 유산의 가치 대비 걱정 상속세의 비중을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세금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 억 ~ 만원)

주: 유산이 10억원인 경우에 대한 걱정 세부담 수준 문항 예시

- 상속세에 중점을 둔 자체설문조사를 통해 세제의 재분배 효과, 효율 비용,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파악
- 실제 세부담 정보 제공,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응답 방식(금액 혹은 비율)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무작위통제실험을 활용

2. 분석결과

- 설문실험을 이용해 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선호와 세제 간의 관계를 분석
 - 설문실험 등을 이용하여 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
 - Kuziemko et al.(2015)에서는 Amazon의 Mechanical Turk 플랫폼을 통해 불평등과 세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국인의 경제적 불평등, 세금, 재분배 정책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Stantcheva(2021)에서는 조세의 재분배 효과와 행태반응에 따른 효율비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연구하며, 이러한 인식이 사회경제적 특징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더 나아가 세제 선호와의 연관성을 무작위실험을 통해 분석함
 - 국가간 세제 비교에서는 주요국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비교함
 - (소득세) OECD의 Taxing Wages에서 제공하는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자료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의 세부담을 비교
 - (상속세) 제도의 복잡성(e.g.,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으로 인해 단일 지표로 세제의 특성을 요약하기 어려우며, 이에 제도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함
 - OECD의 Taxing Wages와 World Value Survey를 이용한 국가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와 저소득층 지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국가일수록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을 분석
 - 소득 격차 개선에 있어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집단이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더 누진적인 소득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응답이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
 - 소득세와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응답자가 인식한 적정 세율이 실제 실효세율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 반면,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서 응답자가 인식한 적정 세율이 실제 실효세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속세에 중점을 둔 자체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적정 세부담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
 - 응답자들은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속세 실효세율을 유산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는 과대 추정하고,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적정 상속세 체계는 실제 세제에 비해 덜 누진적인 경향을 보임
- 세제에 대한 인식과 가장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정치적 성향과 자산 수준으로 나타남
 -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 실효세율, 자산 분포 등 사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제의 효율비용 및 재분배 효과와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적정 세부담에 대한 선호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됨
 - 예컨대,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10억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2%포인트에서 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 성향 집단은 응답자들은 200억원의 유산에 대해 2%포인트 더 낮은 세율을 선호
 -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와 적정 세부담에 대해, 고자산가는 주로 보수적 정치 성향의 응답자와 유사하게 상속세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4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과 퀴즈

이제부터 상속세의 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후 아래 내용에 대한 간단한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퀴즈 정답을 맞혀야만 바로 다음 문항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는 부의 집중과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부유한 가정에서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상속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그러나 상속세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람들은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을 덜 하거나 저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주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체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rogramming] 최초 설명 제시 시 응답자들이 숙독할 수 있도록, 한 글자씩 나타나도록 타이핑 효과

앞서 제시한 상속세 관련 설명문을 다시 보여 드립니다. 각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지 골라 주십시오.

- 상속세는 부의 집중과 [1]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부유한 가정에서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상속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그러나 상속세는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2]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람들은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을 덜 하거나 저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주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체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1]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대물림 2)저출산 3)인플레이션
2. [2]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부정적인 2)긍정적인

[programming] 모두 정답인 경우
“정답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programming] 그 외의 경우, 원래 설명을 한 번 더 보여주고 2차 퀴즈 페이지로 이동.
“오답이 있어 다시 문제 드립니다. 아래 설명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주: G3에게 제시되는 상속세 효과에 대한 설명과 퀴즈

- 예를 들어, 고자산가는 상속세 인상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며, 상속인의 관점에서 유산의 불균등한 분포를 공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짐
-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은 세제 효과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적정 세부담에 대한 선호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실효세율 정보 제공 및 응답 방식은 응답자의 적정 세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실효세율 추정치의 평균이 실제 실효세율보다 높은 5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정보 제공이 적정 세율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
 - 적정 세부담은 금액으로 물을 때보다 백분율로 물을 때 더 누진적인 형태를 보임

-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유념할 필요
 - 최적조세모형에 따르면, 적정 과세 수준은 단순히 사회적 선호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세제로 인한 행태 변화와 능력 분포의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견해가 조세 제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소수의 납세자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선호의 의의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03 학술적 기여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의 적정 세부담에 관한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문헌에 기여함(Kuziemko et al., 2015; Stantcheva, 2021)
 - 기존에 응답자가 인식하는 적정 세부담을 정량화한 연구들에서는 소득세와 부유세만을 대상으로 함
 -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현행 대비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담 수준에 대한 선호는 묻지 않음
- 또한, 적정 세부담을 답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문헌에 측정 방법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함
- 자체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응답자들이 상속세 실효세율을 유산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는 과대 추정하고,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실제 세부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선호가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을 시사함
 - 무작위실험을 통해 세부담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응답자들의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남

04 나가는 글

- 최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주요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음
 - 대표적인 재분배 수단인 소득세와 상속세는 각각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은 증가하는 추세
 - 소득세의 경우 2010년 이후 최고세율이 35%에서 45%로 인상되었고, 상속세는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자산의 명목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세대상 비율이 증가
- 상속·증여세 등 세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상속·증여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첨예한 분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
 - 세제에 대한 지식, 효율 비용과 재분배 효과, 공정성 인식, 적정 세부담 선호 등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 Kuziemko, I., Norton, M. I., Saez, E., and Stantcheva, S., “How elastic are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randomized survey experi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105(4), 2015, pp. 1478~1508.
- Stantcheva, S., “Understanding tax policy: How do people reas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6(4), 2021, pp. 2309~2369.